

# 광주형통합돌봄, 전국 표준모델 된다... 국회 본회의 통과

연령·소득·재산 기준 두지 않아 추진 동시에 8750여명 시민 지원 UCLG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 수상



광주시 지난해 12월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 수상. /광주시청

지원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광주형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

광주시는 '광주형통합돌봄'을 토대로 만들어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으로 확산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형통합돌봄은 기존 노인·장애인 선별주의 방식의 돌봄제도를 확대해 연령과 소득, 재산 기준을 두지 않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만들어졌다.

지원절차는 본인을 비롯해 시·군·구청장의 직권 신청이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의 돌봄필요도 종합 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전문서비스기관에 일괄 의뢰 등 행정의 공공성·책임성이 강조됐다.

광주형통합돌봄은 추진과 동시에 8750여명의 시민을 지원했으며 설문에서도 '사회적 지지·안정감' 점수가 사전 검사 3.43점에서 사후 4.22점으로 상승했다. 삶의 만족도 점수도 사전 2.68점에서 3.11점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12월 세계 최고 권위의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수상했다.

'돌봄 통합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로 광주형통합돌봄 모델은 전국 표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은 지원대상을 노인·장애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질병이나 사고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으로 확대했으며 행정의 '의무방문' 제도가 법적 테두리에서 인정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안은 시·군·구에 전담조직을 둘 수 있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지원 기반을 조성하도록 규정했다"며 "광주시는 모든 자치구에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자체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어 법령이 시행되면 빠르게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은 보건 의료와 장기요양에 관한 통합지원을 명시하고, 의료법이나 약사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우선해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며 "지자체 권한 밖의 의료영역에 대한 통합지원이 가능하고 국가재정으로 지자체의 통합돌봄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 광주형통합돌봄을 확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광주형통합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을 현 중위소득 85%에서 90%까지 확대했으며 긴급돌봄대상도 100%에서 120%로 늘렸다.

식사지원 단가는 끼니당 1000원을 인상해 9000원,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가사지원은 20.5%를 인상해 시간당 2만원으로 설정했다. 집안에서 낙상예방 등 안전생활환경 서비스 지원액도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했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의성군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선정

의성군은 29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 주관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번 사업은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드론 활용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군은 이번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으로 국가시설인 의성군 드론비행시험센터와 연계한 '통합 대(對)드론 시스템 개발 및 불법비행드론 대응 체계 실증', '의성군 특화 드론 레저산업 기반 구축', '드론 활용 유해 야생동물 포획·관리 기반 구축 실증'을 수행한다. /경북=장영우 기자

### 하동군 청년농촌보급자리에 45억 투입

하동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한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인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해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동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2026년까지 국비 45억 원(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해 하동읍 비파리 일원(구 하동읍 부지)에 단독주택형 임대주택(26호), 보육실·헬스장·다목적실 등이 포함된 공동보육 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 진도군 '찾아가는 전남 건강버스' 운영

진도군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전남 건강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전남 건강버스'는 보건소 방문 보건 전담팀과 강진의료원 인력 등이 최신 의료장비를 갖춘 대형버스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고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순회진료를 하는 사업이다.

진료는 ▲혈압·혈당 측정 기초검사 ▲체지방 심전 골밀도 검사 ▲구강검진 ▲한방진료 ▲건강상담 등을 함께 진행한다. /전남(진도)=이대호 기자 eogh7505@

## 경북도, K-푸드 선도산업 육성 박차 농식품 제조·가공업에 326억 지원

### 제조·가공시설 구축사업과 농식품 수출 육성 사업 등 진행

경북도가 한류 붐 확산에 따라 K-푸드 선도 농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농식품 제조·가공업을 집중 지원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농식품 가공 산업 육성에 174억원, 농식품 수출기업 육성에 138억원, 전통식품·전통주 경쟁력 강화에 14억원 등 326억원이 지원된다.

이 가운데 농식품 가공공장 신·증설 및 시설·장비 구매 등을 지원하는 '제조·가공 시설 구축 사업' 예산 174억원은 지난해의 2.6배로 올해는 ▲창업과 시설 현대화를 위한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14곳 75억원)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8곳 77억원) ▲반가공품 생산을 촉진하는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2곳 22억원) 등에 지원된다.



지난해 6월 8일 이철우 경북지사가 수출 농산품을 둘러보고 있다. /경북도

신선 농산물 수출단지 지원, 해외 시장개척 등 '농식품 수출 육성 사업' (138억원)으로는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을 위한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지원' (53곳 62억원) ▲안전한 농식품 수출을 위한 '수출농식품 안전성제고 지원' (49억원)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농식품 국외판촉 지원' (14억원) ▲FDA 등 해외인증 취득, 해외상설판매장 운영 등(13억원)이 진행된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 대구 동성로, 청년버스킹 성지로 도약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일환

대구는 청년예술인 중심의 지역 대표 공연공간 조성으로 침체된 동성로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 '동성로 청년버스킹'이 사업형태와 규모를 확장돼 펼쳐진다.

전국 공모를 통해 선발된 참가팀은 4월부터 11월까지(휴지기 8월 제외) 동성로 28아트스퀘어, 관광안내소 앞에서, 매주 목·금·토 60여회 다양한 장르의 거리공연으로 동성로에서 청년들과 호흡하게 되며, 우수팀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국내외 청년으로 구성된 팀 또는 개인으로 장르 구분 없이 거리공연이 가능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총 50여개의 참여팀

이 선정된다.

참가팀으로 선발된 청년버스커에게는 연간 3회 이상의 공연 기회와 소정의 참가 지원금이 제공되며, 최종 우수팀에는 시상금, 내년도 동성로 청년버스킹 오디션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대구의 중심가 동성로 명성을 되찾기 위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2024 동성로 청년버스킹 Free-ism'은 프리즘을 콘셉트로 청년들을 비롯한 여러 주체가 함께 참여하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 대학교 음악동아리 참여, 청년예술가 포럼 개최, 동성로 상점가상인회와의 협력사업 개발 등을 통해 청년예술인과 시민, 상인이 함께 공생·번영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 광주시교육청, 적극행정 중점과제 투표

온라인투표 통해 최종 2건 선정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4~13일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온라인 투표로 2024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한다. 온라인 투표를 통해 중점과제 2건을 최종 선정한다. 시교육청은 이를 우선 추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투표대상 사업은 ▲학생중심의 따뜻한 광주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글로벌 급식운영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

축을 위한 슬기로운 청렴인사사업 추진 ▲학교소음피해 관리·강화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다.

또 ▲부지활용을 통한 안전 통학로 조성으로 학생·시민의 복리 원원 실현 ▲선제적 재해 예방으로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 ▲사교육 경감을 통한 학생·학부모의 불안감 해소 및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 ▲함께하는 청렴정책 추진 등 7개 사업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 전남도, 양식어가 인력확보에 '빨간불'

필리핀, 계절근로자 송출 중단

필리핀 정부가 대한민국으로의 계절근로자 송출 중단을 결정하면서 전남지역 양식어가 인력확보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양식어가 고용 인력 절대다수가 필리핀 계절근로자들로 이뤄진 상황에 이들을 대체할 다른 국가 인력도 여의치 않아 수확기까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남도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지난 1월 중순께 국내 일부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따른 인력을 보내지 않겠다는 통보를 보내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 일

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국내 지자체단체와 외국 지자체간 업무협약을 통해 3~5개월 가량 합법적인 고용이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 집계 결과 지난해에만 해당 제도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3만 4614명이 전국 곳곳의 농어가에 배치됐다. 전남에서는 화순과 담양, 무안, 진도, 해남 등이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계절근로자들을 받았다.

지난해 입국해 전남 양식어가로 배치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총 1365명으로 이중 필리핀 출신이 1092명을 차지해 80%에 이른다. /전남=양수영 기자

### 전남도 의정활동비 월 50만원 인상

전남도의원 의정활동비가 월 50만원 인상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남 의정비심의회를 열어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심의회는 앞서 지난 21일 도민 공청회, 설문조사, 서면심 의 등의 과정을 거쳐 도민 의견수렴 결과, 재정자립도, 타시·도 인상 현황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해 최종안에 반영했다.

결정된 최종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전남=양수영 기자